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배부...약 131만명 대상

국세청이 21일부터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배부한다.

고지대상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5만명3.4조원으로 주택토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30.7만명7.5조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24만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제공된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급증...과세개편 추진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보다 약 7.7배 증

가했다.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강남에서 널 사 람들은 다 내고 있었던 반면, 강남 4구 외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 주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고물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고객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 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